



3면

도, 정읍 '발전동력 확보' 붙여넣는다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6년 1월 21일 수요일 (음 12월 3일) 제390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도지사 방문, 정책 협의의 장 돼야”

“한중 경제협력, 새만금 중심 동북아 경제질서 한 축으로”

유희태 완주군수 기자회견

“핵심사업 협력 필요
실익 기준 판단” 강조



유희태 완주군수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연초 도지사의 군 방문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완주 방문은 특정 사안을 강행하거나 어떤 결론을 미리 도출하기 위한 자리가 결코 아니다”며 완주군의 주요 현안과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정책 협의의 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 군수는 “의견이 다르더라도 소통의 창구가 열려 있어야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도정에 전달할 수 있다”며 “대화가 차단되면 완주군의 요구와 지역 발전 과제를 논의할 기회조차 잃게 되고 이는 결국 군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군수는 특히 완주군 일원에 조성될 예정인 ‘피지컬AI(physical AI) 생태계 조성사업’을 언급하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총사업비 1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피지컬AI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 개발(R&D) 지원 4,000억원과 시설·장비 구축 2,000억원 등 국비 6,000억원이 투입되고 지방비 1,500억원 민간 투자 2,500억원이 포함되는 민·관·학 협력 사업이다.

유 군수는 “이미 2025년 정부 2차 추경에 시범사업 예산 국비 219억 원이 반영됐고, 2026년 본사업 예산 국비 769억원도 확보됐다”며 “본사업 추진을 위해 남아 있는 1,500억 원 규모 지방비 매칭 비율 협의에서 광역지자체

차원의 책임 있는 부담을 이끌어 군민 부담은 줄이고 실익은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군수는 봉동읍 일원에 약 20만 평 규모의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 885억 원 규모(국비 450억, 도비 53억, 군비 382억)로 컨벤션을 포함한 문화선도산단 조성, 통합 여부와 무관하게 추진 중인 13차 28개 상생협력사업과 관련해서도 도와의 책임 있는 협의와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군수는 “수천억 원 규모의 국·도비 확보와 정책적 지원은 전북특별

자치도와의 긴밀한 정책 공조 없이는 완성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합병원이 없는 완주군에 산재병원과 공공산후조리원 조성 추진을 건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행정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논리가 아닌 오직 경제적 논리로 접근해야 하며, 모든 결정은 군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제는 소모적인 지역 내 갈등을 종식시켜야 한다”며 “법적 최종 권한자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완주군의 지역 여론과 19일 있었던

군의회 기자회견 내용 등을 충분히 수렴해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군수는 “이번 도지사 방문이 갈등의 장이 아니라 완주의 굽직한 현안을 논의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차분한 대화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완주군의 자율성을 지키는 원칙은 굳건히 고수하면서도, 글로벌 수소도시이자 AI 신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의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산업부-중국 상무부 ‘한중 상무 협력 대화’ 신설 관련

민주 이원택 의원, “동북아 경제 협력 새 흐름 만들 출발점”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군산·김제·부안)은 “한중 경제협력 이 외교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새만금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경제 질서의 한 축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가 장관급 정례 협의체인 ‘한중 상무 협력 대화’를 신설하고 산업단지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과 관련해 “한중 간 경제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동북아 경제 협력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합의는 지난 15년간 중단됐던 한중 간 장관급 정례 소통 채널을 복원·고도화한 것으로 교역·투자·공급망 협력 전방에서 안정적인 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2015년 한중 FTA 이후 공동 산업단지 지정됐음에도 투자 성과가 미흡했던 새만금이 다시 공식 의제로 부상한 것은 새만금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전북 산업구조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

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단지 협력 MOU 체결과 중국 상무부 투자조사단의 새만금 방문은 전북이 단순한 국내 산업을 넘어 동북아 공급망과 연결되는 전략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는 전북의 통상·외교 레버리지(지렛대효과)를 확대하고 부품·소재, 녹색에너지, 바이오·제약 등 미래 산업 중심의 성장 기회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 일대를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국제도시로 발돋움해야 한다”면서 “하늘의 익산 국가식품롤러스터와 연계해 새만금이 K-푸드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거점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만 이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조사단 방문 이후다”며 “조사와 검토에 그치지 않고 얼마나 빠르게 실제 투자 프로젝트로 연결되는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2026년 상반기 내 상생성과 실효성을 갖춘 시범 투자 성사가 새만금 중국 투자 확대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그는 “이제는 전북이 투자 즉시 가능한 인프라와 행정 체계를 갖추고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업체를 실질 성과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새만금과 중국이 동반 성장하는 실질적 투자가 가시화되기를 전북도민과 함께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2차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내달 중 출범 전망

범여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이른바 2차 종합특검 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이어서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17개 의혹 ‘최대 170일’ 수사... 250명 규모 출범할 듯

농어촌특별세법·재난안전관리 개정 법안 등도 의결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 3대 특검에서 수사가 미진하거나 다루지 못했던 총 17개 의혹을 대상으로 한다. 수사 대상에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으로 불리는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기획 의혹을 비롯해 명태균·김진법사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씨 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 등이 포함됐다.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물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준비기간 포함 최장 170일을 수사할 수 있다. 이달 중 후보 추천을 거쳐 늦어도 2월 중엔 250명 규모의 특검이 출범할 전망이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청년 미래저축을 농어촌 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는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뉴시스

정부, ‘李 거역도 피습’ 테러 지정... 사건 추가 진상규명

정부가 2024년 1월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피습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고 추가 진상규명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요인사 관련 사건 테러지정 여부 검토’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뉴시스

정부는 김 총리의 요청으로 진행된 국정원·경찰·소방·방첩사·국과수 합동 조사와 법제처 검토를 종합해 당시 범인의 가해 행위가 테러방지법상 테러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거역도 피습 사건의 테러 지정에 따라 정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뉴시스

IMSIL-GUN
임실군

천만관광
명품도시
이제임실